# 모레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깜깜이 선거'

**후보들 안갯속 레이스**
**文, 부동층 끌어안기 총력**
**安, 호남 총출동…역전 노려**
**洪 '보수 대행진' 결집 호소**
**劉 "소신 투표 해달라"**
**沈, 전국 돌며 스킨십 확대**

'5·9 장미대선'의 여론조사 결과가 더 이상 공표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국면'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선거일까지 안갯속 레이스를 펼치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선대위는 대선일까지 이어질 '안갯속 6일' 동안 효과적으로 유세를 벌여 최종 승리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략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3일부터 선거일까지 남은 6일 동안 지지율 변화 추세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지지층 다지기를 강화하고, 부동층 끌어안기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선두를 놓친 적이 없지만, 투표일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지층 이탈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지지층 균열이 생겨도 '깜깜이 선거' 특성상 여론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가 1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선두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입장인 문 후보 측은 최근 들어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움직임 등을 경계하며 투표일까지 실수를 줄이는 등 막판까지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 측은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전 투표 독려로 호소할 예정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깜깜이' 국면에 접어들기 전 지지율 반등세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 공표금지일 이후에는 실제로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유권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주말을 승부처로 보고 당의 지역적 기반이자 민주당과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호남에 지역구 의원 전원과 호남 출신 비례대표 의원을 대거 투입해 이른바 '30인, 3일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호남에서 안 후보가 앞선다는 신호가 나오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도 안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 중도·보수층을 다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최근 결집하기 시작한 보수층 유권자들을 더 끌어모아 투표까지 이어지도록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당은 남은 기간 전국 각지에서 보수 결집을 호소하는 대대적인 '보수 대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호소할 계획이다.

선거운동 초반 인지도는 다른 후보보다 열세였지만, 여러 차례 방송토론과 유세를 통해 차이를 크게 좁혔다고 보고 마지막 한 주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금지로 낮은 지지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측면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지지층의 사표 방지 심리를 차단하고 '소신 투표'를 최대한 끌어낼 기회인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아놓았던 당의 총역량을 남은 일주일 집중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심 후보를 알릴 좋은 기회인 TV토론이 끝남에 따라 심 후보가 직접 현장 곳곳을 방문해 정책과 비전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투표합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회 시작에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文 "일자리 국가가 주도"…安·劉 "중기·벤처 키워야"

5차 TV 토론

5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28일 밤 서울 상암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벌이며 격돌했다.

문 후보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고령화·고용절벽 등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실패"라며 "일자리를 여전히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책임한 것이다.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洪 "담배·유류·통신비 인하"**

**沈 "성과 분배해 불평등 해소"**

안 후보는 "이제는 민간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며, 정부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살리기로, "담뱃값·유류세 50% 인하, 통신비 인하, 김영란법 개정을 하겠다. 유류세 인하 효과만도 7조2천억 원의 가처분 소득 증가, 15조 원대 내수활성화, 10만 명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금의 경제 위기는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경제에서 대기업 혁신을 못 했기 때문으로, 그들 스스로 혁신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부실화하면 정리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서 성장의 새 희망 씨앗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강력한 소득주도정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여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대기업들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우겠다"며 "과감한 국가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

# 安 "저소득 청년에 5년간 월세 10만원"

**소농에 직불금 30% 추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 30일 저소득 청년 독립가구 20만명에게 월세 10만원을 5년간 지원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 5만호씩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독립가구 소득 하위 20만명에게 월세 10만원씩 5년간 지원과 청년공공임대주택 연 5만호 건설을 각각 공약했다. 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대상 20만 가구 확대 및 공공실버주택 임기 내 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9일 1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농업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가족농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존 직불금은 유지하되, 1ha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규모를 연간 913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쌀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은 경작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해 지급 규모가 결정되도록 설계됐다. /박지경기자jkpark@

# 국민의당 "文아들 근무않고 월급 받아"

**민주 "파견업무 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한 후 상당 기간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진영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준용씨는 고용정보원 출근 첫날인 2007년 1월8일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잡월드) 설립추진기획단으로 파견발령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정작 파견대상 부서에는 준용씨가 파견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발령이 났으니 고용정보원에 근무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파견대상 부서에서도 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결국 준용씨는 아무 데서도 일을 하지 않고도 월 300만 원의 급여를 꼬박꼬박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 측 관계자는 "노동부가 파견 요청한 네 명 중 두 명은 잡월드 설립추진기획단서 현장 근무를 했다"면서 "준용씨 등 두 명은 고용정보원에서 내근하며 파견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일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文 40%·安 24%·洪 12%·沈 7%

**갤럽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8일 또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문 후보는 40%의 지지율로 24%의 안 후보를 16%포인트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2%,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4%,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가 1%로 각각 조사됐다.

문 후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지만 최근 3주간 평균 지지도 40%를 유지했다. 40대 이하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려온 문 후보는 50대 지지율도 지난주 30%에서 이번 주 43%로 끌어올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선두에 올랐다.

4월 2주차 조사에서 37%까지 찍었던 안 후보는 지난주 7%포인트, 이번주 6%포인트 각각 하락해 2주 만에 총 13%포인트의 지지율을 잃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7 대선 브리핑

**바른정당 이은재 한국당 복귀**

이은재(재선, 서울 강남병) 의원이 지난 28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지난 1월24일 바른정당 창당 후 첫 탈당자며, 이에 따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기존 33명에서 32명으로 줄었다.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를 향해 비문(비문재인) 후보 간 3자 단일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탈당을 고려 중인 의원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알려져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불법, 강제 반입
# 사드 장비 즉각 철수하라!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으로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조기에 실시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4월26일 새벽 8천명의 대한민국 경찰을 앞세우고 사드 장비를 기습 반입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소성리 주민들과 종교인들을 폭력적으로 짓밟았다.

미국이 평소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와 매듭지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다. 국정농단 공범자로 적폐청산 대상인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에 어떤 결정도 내릴 자격이 없다. 이번 사드 장비 강제 반입은 사드 대못박기와 함께 안보를 대통령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사드 배치는 어떤 공식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의 동의나 국회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불법 조치이다.
이에 자주, 민주, 평화와 통일이라는 광주와 호남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한미당국을 강력 규탄하며 강제 반입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대선 후보라면 사드배치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7년 5월 1일

**광주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준)**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